

與, 부동산 정책 실패 사죄...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기자회견...부동산 불로소득 원천봉쇄 첫 주택구입자 금융규제 완화...청년·신혼 50년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

4·7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31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 사과하고 주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공식 제안했다.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는 차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이낙연 위원장으로서선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 사과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집값 상승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까지 겹치며 부동산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보고, 직전 당 대표이자 재보선을 지휘하는 선대위원장으로서 사과에 나선 것이다.

그는 이어 "청년과 서민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며 "그런 터에 답을 일부 공직자는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국민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됐다"며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작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고 강조한 뒤,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에게 대해 개발·보유·처분 등 단계별로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부동산 투기의 원천봉쇄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부동산 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다"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처음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며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고 빛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청약 우대 등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청년·신혼세대에게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

증을'를 도입해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청년 세대 월세 지원과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과 주거 복지를 전담하는 주택부 신설도 재차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다짐한 뒤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달라"며 "금, 토요일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는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정도로 떨어진 민심이 돌아올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더욱 혁신하겠습니다" 4·7 재보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가운데) 상임선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동참하라"

소속 국회의원 174명 조사 의뢰... "국민 앞에 진정성 보여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즉각 동참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성준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면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102명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전직 의원 출신'이라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직자 부패 조사 권한을 갖춘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인 국민권익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힌지 2주가 지났

다"며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조사를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했고 신뢰한다는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즉각적으로 의뢰하고 추진하라. 국민의힘은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감사원의 조사에 즉시 응할 수 있다"면서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밝힌 대로 국민의힘은 102명 국회의원 전원의 동의를 이미 받았다.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나서 국민 앞에 부동산 부패 척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비서 면직' 정의당 류호정 원내수석부대표 당직 박탈

수행비서 면직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31일 당직 박탈 처분을 받았다. 정의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의원에 대한 당기위 결정문을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정의당 원내대변인 겸 원내수석부대표직을 맡고 있다. 결정문은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2월 4일 기자회견이 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회견을 강행하여 당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위로 인정된다"며 "피해제소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일반당원보다는 엄중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아동학대 예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광주 동남) 국회의원이 지난 31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피해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후 14일부터 71개월 까지 총 8회에 걸쳐 시행되는 영유아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국가기관의 아동학대 징후의 조기 발견과 예방,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는 양육자로부터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 아동의 피해를 외부에서 알아내기 힘들다. 정기적으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양육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남, 농지 투기 방지 농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3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도 매년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는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했다더라도 취득 이후 5년 동안은 매년 농업인확인서와 해당 농지 산물의 연간 판매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경영확인 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투기목적의 농지소유를 막고 농지가 온전히 농업경영에 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오늘부터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1일 "4월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금지기간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남선관위는 관련 문의를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에서는 오는 7일 전남도의원 2곳(순천 제1선거구·고흥 제2선거구)과 군의원 1곳(보성 다 선거구) 등 3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대인동 싼 빵

- ▶ 동구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 가능
-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
- ▶ PF 28억 가능
- ▶ 매매 - 21억원, 일시불 대폭 조정가

중개환영. 010-3605-5000

“금” “매”

-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20층 중 8층, 사무실 전용
- ▶ 계약 108㎡, 전용면적 67㎡
- ▶ 코너, 전망 좋음, 주차 편리
- ▶ 매매 - 1억1천만원
- ▶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6837-4700